

국힘 “연금·종부세 개편 논의하자”

민주당에 공식 제안... ‘세수 핑크’ 지적에 “제도 개편과는 무관”

국민의힘이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 세 개편에 대해 공식 협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

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을 압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정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종부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전 대표를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주 치고 빠지기, 간 보기 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자는 의미이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핑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 목적의 세제 개편이 맞냐는 질문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망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불통’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찬대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최악 국정농단”

“특검으로라도 진실 밝혀야... 김여사, 명품백 직접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가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주 꼬리를 자르려 하는데, 도마뱀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백년 양보해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할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자,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해명이 다 거짓이라는 뜻”이라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는 자주 애꿎은 아랫사람에게 해명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요청했다는 검찰도 한심하다. 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디에 갔냐”라며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이다. 특검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을 ‘광주사태’로...역사인식 도마 위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는 등 그의 역사 인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것이 집중 추궁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논문 간 (인용할 때 용어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 ‘12·12 거사’와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국민들, 광주시민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제 불찰이다. 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표현이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사 인식이 아닌

것 같다”며 “(당시) 각 언론에서도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두둔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창엔씨가 지난해 매출액 93%를 저가 일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로부터 발생했다”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창·송천이앤씨가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개는 두 회사만 입찰했다면서 ‘쪼개기 입찰’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제청장 시절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년간 서울지방국제청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갑질을 휘두른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대형입사학원 카드텔 ಎಂದು 하니 13일 만에 세무조사 착수하고, 쌍방을 세무조사도 5개월 만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국 “10월 재보궐·지선에 후보 내겠다”

광주·전남 기자단 간담회... “민주당 일당독점 체제 개혁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지방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광주 지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광주·전남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영광, 곡성 등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아직 세가 부족하다고 도망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아직 어디에 뛰어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선 결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표 두 개 중 하나를 조국혁신당에 주셨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잘하나 보자”라는 생각이셨을 것 같다. 저희가 성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광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 ‘일당독점’ 체제에 대한 정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남 전체에서 민주당은 30여년이 넘었다. 당내 경선만 이기면 당선되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의 취지를 생각하면 특히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걸 전제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지방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 정치, 광주, 호남,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며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등 혁신당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소중하고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에 박수를 치지도 않을 것”이라며 “틀린 것이 있다면 틀렸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저출산 문제 연구 ‘순풍포럼’ 출범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순풍(順風) 포럼’이 16일 출범했다.

순풍 포럼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30대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착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

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인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신규 건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최형두) ▲동거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미혼모 임대 지원(김정겸) ▲출산휴가·휴직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김소희) ▲독신세 과세(강선영)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